

社說

보수 또다시 '분열'하면 정권 재창출 '물거품'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헌정사에 남을 충격적 사건이었고, 그 여파로 다가올 6.3 조기 대선은 이제 정권 교체 여부를 체제 수호의 전면전이 됐다. 대선 일정은 이미 확정됐고, 시간은 보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보수의 승패는 단 하나에 달려 있다. 단일화, 그리고 통합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보수는 치명적인 분열로 정권을 내주었다. 홍준표·유승민·안철수로 나뉜 보수표는 총합 52%에 달했지만, 결국 문재인 후보에게 권력을 헌납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안보는 허물어졌고 경제는 침체를 거듭했으며 교육과 사법체계에까지 좌파적 이념이 오염됐다. 문재인 정권의 5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력은 '다수의 독재'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이 비극이 더 이상 반복대선 안 된다.

이번 대선은 구조적으로 과거와 다르다. 당 밖의 돌출 후보보다는 김문수·홍준표·오세훈·나경원·원희룡·이철우 등 국민의힘 중심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이들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각자의 노선과 입장 차이로 다시금 분열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현재 주자들의 노선은 뚜렷하다. 최근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정선거 해소와 보수 정체성 회복을 내세우며 청년층과 강성 보수층을 동시에 흡수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정통 보수의 상징성을 확보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수 진영 주자들 모두가 체제 수호라는 역사적 사명을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서야 한다는 점이다.

변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30 보수 청년층이고, 다른

하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로 구성된 '탄반모(탄핵반대모임)' 조직이다.

2030 청년층은 더 이상 단순한 이념이 아닌 '공정'과 '정당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부정선거 문제를 음모론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실사구시적 시선이 강하다. 정당에 대한 맹목적 충성 대신, 이슈 대응력과 진정성 있는 메시지에 따라 움직이는 세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하나의 축은 '탄반모'다. 탄핵 반대를 중심으로 결집한 이들은 수도권 중심의 원외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경선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지지는 현실적으로 지역별 조직력과 표토 직결될 수 있는 힘이다. 각 주자는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설득력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분 없는 야합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후의 단일화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민심과 당심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주자는 모두의 지지를 받으며 나아가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일부 주자가 개인의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경선 불복이나 탈당 출마와 같은 파행을 저지른다면 그 순간 당사자는 물론 보수의 미래가 무너진다.

정치란 결국 명분과 결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는 궤멸의 문턱까지 몰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다수는 민주당의 폭주를 더 똑똑히 바라보게 됐다. 이는 보수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만일 보수가 분열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 역사는 지금도 그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로 기업들이 존재 위기에 놓여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9일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비용을 다음 주 추경 10조 원에 포함시켜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필수적 지원이다.

사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늘면서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계기업은 이자 보상배율이 3년 연속 1.0 미만인 기업으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어느 부문보다 유통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온라인 쇼핑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은 법정관리에 들어섰다. 이런 양상은

내수 기반 제조업과 물류업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설상가상으로 정국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발(發) 관세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소매 시장 성장률은 0.4%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이후 가장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뚝은 은행권으로 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무수익 여신 잔액은 3조759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3조2040억 원에 비해 5550억 원(17.3%) 증가했다. 무수익 여신은 돈을 받아간 기업의 채무 재조정과 법정 관리 돌입 등으로 이자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여신에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을 합한 것으로 통상 '쌍둥 대출'이라고 불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업부채 부담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기업의 부채는 2015년 말 1621조 원에서 작년 1분기 2743조 원으로 10년도 안 돼 1000조 원 이상 불

어났다. 이는 주요 43개국 중 중국·미국·일본 등에 이어 9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93.1%에서 112.2%까지 늘어났다.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업부채도 양적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의 화약고 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채무관리 방안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하길 촉구한다. 국난적 경제 불황기에 한계기업 증가는 여타 중소기업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음을 뜻한다.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이자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예산정책처의 제안처럼 한계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지원과 기업 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의 기업 대출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체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경제의 구조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은 국민의 경제

제적 부담을 덜고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이와 함께 원자재값 급등으로 금융 비용 등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경제 위기가 가중될수록 가장 먼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곳은 부실 위험을 마주한 중소·한계기업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면서도 고용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돼야겠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90% 정도다. 나머지 10%는 대기업 근로자들이다. 경제의 실탄줄 같은 중소기업의 위기는 서민 삶의 위기와 직결돼 있다. 규제 완화와 기업회생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 수 있음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국회·지자체 등은 이에 살기해선 안 된다.

6.3 대첩 자유우파 필승의 조건



박필규의 민심군심
民心軍心

박필규 객원논설위원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는 대한민국이 법치가 죽은 진짜 비상 상황임을 또 증명했다. 보수우파의 현재 재판관들의 양심을 믿었고, 계몽된 2030 세대의 절규와 활화산처럼 일어나는 자유 전사들의 구국 물결을 보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믿었지만 순진한 믿음은 좌파 사법 카르텔과 종북·골중 카르텔의 기만 전술에 짓밟혔다. 법관에게 양심이 있다는 믿음, 진실이 이긴다는 보편적 믿음 또한 무너졌다.

반국가 세력의 국가 파괴와 부정선거 만행을 알리기 위해 계엄 형태를 빌린 12.3 비상 구국 계엄을 그들은 신속하게 내란으로 엮는 용어 혼란 전술을 구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대선 불복 수준의 저항을 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44 법관으로 대미를 완성한 듯하다.

인공지능보다 못한 현재의 파면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항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인이다. 현재는 과거 판례, 즉 1997년 전두환 대통령 내란사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므로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인용했다. 현재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도 편파적이고 불명확하며 공정성이 없다고 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해도 역사의 수레 바퀴는 되돌리지 못한다. 이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 화요일로 지정됐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10일과 11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진행된다. 두 번이나 대통령을 좌파의 선동으로 잃은 자유 우파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6.3 대첩을 앞두고 있다. 이기지 못하면 총체적 난란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파면'에는 '파멸'로 대응해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 계엄이 '파면'의 이유라면 실질적 내란 행위로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친 세력은 '파멸'의 대상이다.

현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는 민주당의 승리로 보이지만 파멸의 문도 동시에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부로 전(前)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한민국 수호 전사로 싸울 자격을 갖추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계몽된 2030 전사와 시각 교정으로 야당과 좌파 언론에 휩쓸리지 않는 전사를 얻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전사가 되어 그동안 인지한 반국가 세력의 비밀과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방지 대책부터 세워야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는 끔찍한 국기문란 범죄다. 범죄적 기만 행태가 드러났는데도 부정선거를 끊지 못하는 것은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연합뉴스

AI보다 못한 현재의 파면 선고 원천 무효... 재심해야

4.4기만전 교훈 삼아 거짓 정보에 또 당하지 말아야

자유 우파 후보 단일화는 6.3 대첩의 최우선 조건

다. 국민의힘은 당내 후보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부정선거 대비 기구 주관하에 공정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 경선을 선관위에 맡기는 것은 6.3 대선을 조기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여야는 21대 대선만큼은 부정선거 시비가 없도록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 투표만 실시하며 전자 개표기 없이 수개표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도 합의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투표관리관이 본인 도장으로 날인하고, 참관인에 의한 투표자 계수와 투표함 보관장소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사전투표 유지와 전자 개표기 사용을 고집한다면 21대 대선은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전투표 폐지를 비롯하여 시행령 개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으로 2020년 키르키스스탄처럼 국제선거감관단의 힘을 빌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제선거감관단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유우파 후보 단일화는 6.3 대첩의 최우선 조건

이재명 대표는 오랜 기간 지지율 30%대에 갈려 있다. 그가 출마를 고집한다면 대법원은 대선후보 등록일인 5월11일 이전에 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전원합

의 파기자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19대 대선 때도 우파가 후보를 단일화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지 않았다. 자유우파는 좌파에 대항해 자유 민주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해 싸워 왔고, 대한민국을 중공의 침탈로부터 지켜 낼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거나 대통령 후보 등록 유경험자는 이제 나서지 말아야 한다. 밑바닥부터 국회의원과 단체장·장관을 두루 경험한 구국의 전사를 선택해야 한다. 부정선거 방지 대책부터 세우고 후보를 단일화하여 6.3 대선에서 승리하자. 6.3 대첩을 위해 자유 우파는 구국의 결기로 단결하자.

미디어 프리즘

'음모론'을 컨스피러시 씨어리(conspiracy theory)라고 흔히 말한다. 음모론이라는 개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영화 '컨스피러시(Conspiracy theory)'가 세상에 나온 때로 추정된다. 멜 깁슨과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이 영화의 출현은 음모론이라는 표현이 대중화된 기점이었다. 그 이전에는 호사기들의 전문용어였다.

우연하게도 이 영화가 나온 지 두 달 만인 그 해 11월 한국과 아시아에 사상 초유의 외환 위기가 닥친다. 그 충격으로 김영삼 정권은 몰락하고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행운을 거머쥔다.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 보자. 1895년 프랑스 르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발명하자 이 새로운 예술의 등장에 러시야를 중심으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을 만든 블라디미르 레닌과 이오시프 스탈린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선전선동에 관심이 많았던 이 혁명가들은 영화의

'음모론'인가 아니면 '음모'인가

의혹이다.

16세기에 유럽에서 생겨나 수세기 동안 활동한 프리메이슨이나 18세기의 일루미나티,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논란에 올라 있는 딥스테이트의 존재는 실재하는 걸까, 실체가 없는 음모론일까.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는 한때 실제로 좋은 목적과 구호를 내걸었고 좋은 활동도 했던 조직이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비밀조직 활동을 했기에 음모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그림자 정부로 해석되기도 하는, 그러면서 좌파의 숨은 동지로서 의심되는 딥스테이트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국가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부정선거가 음모론으로 치부된다. 대통령이 파면됐다. 음모론인지 음모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검증조차 거부한다. 그러나 '부정선거 카르텔의 음모'가 있다고 의심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맹세희 디지털뉴스부장